

건설동향브리핑

제425호 (2013. 8. 19)

■ 경제 동향

- 상반기 국내 건설수주, 전년 동기비 34.7% 감소

■ 정책 · 경영

- 국내 건설산업 성숙기 진입, 2020년까지 유지 전망
- 중소 건설업체에 적합한 소규모 민자사업 개발해야

■ 정보 마당

- 미국의 인프라 시설 투자 현안과 시사점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민자 SOC 유인책 필요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13년 상반기 국내 건설수주, 전년 동기비 34.7% 감소

- 공공 14.2%, 민간 41.1% 감소해 12년 내 최저치 기록 -

■ 상반기 국내 건설수주 12년 내 최저치

- 2013년 상반기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34.7% 감소, 12년 내 가장 부진한 30조 6,207억원을 기록함.
 - 국내 건설수주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1개월 연속 10% 이상의 높은 감소세를 지속, IMF 외환 위기 기간인 지난 1997년 1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17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가장 장기간의 침체를 기록함.
 - 올해 상반기 수주액인 30조 6,207억원은 2001년 상반기의 21조 1,905억원 이후 12년 내 최저치이며, 예년의 70%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의 침체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 공공 부문 : 금액상 예년보다 부진,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

- 공공 부문 수주는 정부의 추경 및 SOC 예산의 증가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신규 발주가 부진해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한 9조 5,537억원을 기록함.
 - 공공 토목수주는 6조 5,439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함.
 - 주택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51.0% 감소한 1조 297억원을 기록,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가장 침체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비주택수주는 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세종시 청사 건립 공사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한 1조 9,802억원으로 다소 양호한 모습을 보임.

<2013년 상반기 부문별 수주 실적>

(단위 : 십억원, 전년 동기비 %)

구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2. 상반기	46,908.0	11,133.4	7,279.1	3,854.3	2,102.6	1,751.7	35,774.6	11,203.4	24,571.3	13,801.4	10,769.8
2013. 상반기	30,620.7	9,553.7	6,543.9	3,009.9	1,029.7	1,980.2	21,066.9	4,376.3	16,690.6	9,087.4	7,603.2
증감률	-34.7	-14.2	-10.1	-21.9	-51.0	13.0	-41.1	-60.9	-32.1	-34.2	-29.4
2005~11년 상반기 평균	44,052.7	13,685.8	9,232.1	4,453.7	2,425.6	2,028.1	30,367.0	5,169.1	25,197.8	16,743.5	8,454.3

주 : 민간 수주는 국내 외국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자료 : 통계청.

■ 민간 부문 : 모든 공종에서 부진, 전년 동기 대비 41.1% 감소

- 민간 부문 수주는 모든 공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기 대비 41.1% 감소한 21조 669억원을 기록,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급격히 위축된 2009년 상반기 이후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함.
 - 민간 토목수주는 평년도 수준보다 대략 0.8조~1조원 낮은 4조 3,763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60.9% 감소하였음.
 - 주택수주는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도 위축되어 전년 동기 대비 34.2% 감소한 9조 87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비주택수주도 예년보다 부진해 전년 동기 대비 29.4% 감소한 7조 6,032억원을 기록함.

■ 철도 및 궤도, 상하수도 등 일부 공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부진

- 건축 공종에서는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전년 대비 모두 감소
 - 주택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36.4% 감소해 가장 감소폭이 컸으며, 다음으로 공장 및 창고가 33.6%, 사무실 및 점포가 25.1%, 관공서 수주가 19.1% 감소함.
- 토목 공종의 경우 철도 및 궤도, 상하수도 수주를 제외하고 모두 부진
 - 철도 및 궤도와 상하수도 수주는 금액상으로 모두 예년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던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6.5%, 11.0% 증가함.
 - 도로 및 교량, 토지 조성, 발전 및 송전 수주는 각각 30.8%, 47.8%, 74.5% 감소함.
 - 한편, 기계설치 수주는 금액상으로는 예년보다 양호한 3조 3,037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따른 영향으로 38.9% 감소함.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기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등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상하수도	토지조성	발전 및 송전	기계설치
2012. 상반기	15,904.0	5,237.5	2,913.1	3,828.9	542.0	2,478.3	808.5	409.1	1,820.6	6,106.6	5,402.8
2013. 상반기	10,117.1	3,925.1	1,934.2	3,095.7	628.5	1,716.0	1,427.0	454.1	951.0	1,557.7	3,303.7
증감률	-36.4	-25.1	-33.6	-19.1	16.0	-30.8	76.5	11.0	-47.8	-74.5	-38.9
2005~11년 상반기 평균	19,169.1	4,367.5	2,879.5	2,372.5	862.9	3,845.1	1,674.5	776.6	1,831.7	1,782.5	2,705.7

자료 : 통계청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국내 건설산업 성숙기 진입, 2020년까지 유지 전망¹⁾

- 시장 점유율 보호 · 신수종 제품 개발 등 적극적 대응 필요 -

■ 성숙기 산업의 정의 및 주요 특성

- 성숙기 산업이란 해당 산업 내 주요 제품들이 제품 수명 주기상 대부분 성숙기에 도달한 제품들로 이루어진 산업으로 정의됨. 주요 특성은 제품 수요의 정체, 제품 혁신 속도의 둔화, 높은 경쟁 강도, 치열한 가격 경쟁, 수익성 하락 등임.

<성숙기 산업의 특성>

구분	내용
제품 수요 및 생산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수요 및 생산 규모의 증가세 급격한 둔화 또는 정체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표준화의 진전, 제품별 특이성 하락 ▪ 제품 품질 우수, 제품 혁신 속도의 둔화 ▪ 제품의 사소한 개선, 모델 업그레이드 위주로 개선 ▪ 제품 수요의 가격 탄력성 높음.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간 경쟁 강도 높음 ▪ 치열한 가격 경쟁 전개 ▪ 신규 기업의 진입이 쉽지 않고, 기존 경쟁자 이탈 시작 ▪ 기업 간 M&A 현상 발생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가격 최저 수준 ▪ 제품 가격의 변동성 작음.
기업 수익성 및 부가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제품의 수익성 낮음. ▪ 기업의 부가가치가 R&D와 같은 가치사슬상의 초기 단계보다 제조 단계에서 생산 효율화 등을 통해 창출되는 경우가 일반적
생산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공정 최적 상태, 추가적 원가 절감 쉽지 않음. ▪ 산업 전체적으로 과잉 생산 능력

■ 국내 건설산업 2000년대 들어 성숙기 진입, 2020년까지 성숙기 유지 전망

- 국내 건설산업은 성숙기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 규모의 정체 현상이 2000년대 이후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2000년대 들어 이미 성숙기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됨.
 - 1990년대에 급속히 증가했던 국내 건설투자는 IMF 외환 위기 직후부터 성장이 멈춰 최근까지도 성장이 정체된 모습을 보임.
 - 이 외에도 시장 규모의 정체 기간, 수익성 하락 추이, 기업 수 변화 등을 기초로 분석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3년 7월에 발간한 「성숙기 산업의 특성 및 기업 대응 전략 고찰과 국내 건설기업에의 시사점」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전문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 수록되어 있음.

한 결과, 국내 건설산업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됨.

- 2008년 이후 국내 건설수주의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건설산업이 이미 쇠퇴기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됨.
 - 그러나, 2008년 이후 건설투자의 부진이 이어진 것은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주택 경기의 침체로 인한 주거용 건축투자의 침체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국내 건설산업이 이미 쇠퇴기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
- 주요 기관들의 국내 건설투자 중장기 전망 결과를 참조할 때 국내 건설산업이 시장 규모의 측면에서는 2020년까지 성숙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²⁾ 결과, 국내 건설투자는 2020년까지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국회 예산정책처도 2016년까지 국내 건설투자가 매년 전년비 0~2%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며 정체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단, 산업 내에서 주택 리모델링 등 유지·보수 시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성숙기 산업의 5가지 기업 대응 전략

- 성숙기 산업에 위치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전략은 시장 점유율 보호, 제품 수명 주기 연장, 시장 다변화, 신수종 제품 개발, 한계 제품 퇴출 등의 5가지 전략임.
 - 시장 점유율 보호 전략 : 가격 인하, 품질 개선,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성숙기에 진입한 자사 주력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거나 확대하는 전략
 - 제품 수명 주기 연장 전략 : 새로운 고객 발굴, 제품의 새로운 용도 개발, 제품의 성능 및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성숙기에 진입한 주력 제품의 수요를 새로 증가시키거나 쇠퇴기에 접어들지 않게 유지하는 전략
 - 시장 다변화 전략 : 성숙기에 진입한 주력 제품의 전체 수요가 정체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시장을 해외시장 등으로 다변화하여 제품 수명 주기를 연장하는 전략
 - 신수종 제품 개발 전략 : 기존의 주력 제품이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 진입을 앞두고 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대체할 제품 또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전략
 - 한계 제품 퇴출 전략 : 시행 가능한 전략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이 투입되는 비용보다 크지 않을 경우 제품 생산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전략

이흥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국내 건설투자의 중장기 변화 추이 연구」, 2009. 5.

중소 건설업체에 적합한 소규모 민자사업 개발해야¹⁾

- 노후 교육 시설 · 중소 규모 생활체육 시설 · 도시공원 등 유망 -

■ 중소기업체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의 기본 방향

- 기존 민간투자사업에 중소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
 - 민자사업이 실행되는 시장의 구조를 감안할 때, 제도적으로 중소기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물량을 강제하는 형태의 정책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음.
 - 더욱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중소기업체로서는 새로운 민자사업의 유형이 필요하나, 그 방식이 중소기업체의 기존 영역인 기존 재정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형태가 되는 것은 곤란함.
 - 이는 새로운 물량의 창출이라기보다는 물량의 이전에 가까운 반면, 공사 수주를 위한 비용, 노력, 리스크 등은 훨씬 커지는 양상이 됨.
- 따라서, 중소기업체로서는 단순한 물량 이전 효과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사업 유형의 개발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전제로 하여 사회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 제약으로 인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소규모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 완전한 신규 물량 창출은 아니더라도 물량 확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전제 조건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필요

-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체의 참여 확대를 모색하는 것은 불가능한 논의임.
 - 우선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자체의 활성화가 전제 조건
- 단기 검토 과제로서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의 변화가 요구되며, 중장기 검토 과제로서 재원 및 자금 조달에 대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3년 8월에 발간한 「중소 건설업체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활성화 방안 및 유형」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전문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 수록되어 있음.

- 단기 검토 과제 : 투자 위험 분담 방식을 민간 제안 사업에도 적용,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상 사업의 확대, 민간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완화 필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해지시 지급금 산정 대상에 후순위 차입금 포함, 부대·부속 사업의 합리적 추진 등
- 중장기 검토 과제 : 민자사업에 갭 펀드(Gap Fund) 및 인프라 모태 펀드의 도입, 무료도로(Shadow Toll) 도입 등 검토
- 특히, 민자사업 대상 시설 기준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것은 중소 건설업체의 사업 유형 모색에 있어 중요한 과제임.
 - 이렇게 되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대형(BTL) 사업에서 민간 제안을 허용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중소 건설업체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중소 건설업체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의 유형

- 중소 건설업체에게 적합한 사업 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업계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요구됨.
 - 대략 1천억원 미만의 총사업비 규모,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보다는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 또는 BTL+BTO 혼합 방식, 운영에 대한 건설업체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특성 등이 중요
 -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지향점에 부합함으로써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
 -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요를 가지는 사업
- 이상의 관점에서 중소 건설업체가 추진을 검토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유형 중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교육 시설 : 노후 학교 증·개축 사업을 BTL 방식으로 추진, 규모 조정 대상 교육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 공립 유치원이 없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 시설을 BTL 방식으로 추진, 공공 보육 시설을 BTL 또는 BTL+BTO 방식으로 추진
 - 체육 시설 : 수영장이 없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체육 시설 복합화, 중소 규모 생활 체육 시설 건설, 청소년 수련 시설을 BTL 또는 BTL+BTO 방식으로 추진
 - 기타 : 노인 복지 시설, 소규모 관공서, 재난 대비 시설, 도시공원 등 모색

이승우(연구위원 · swoolee@cerik.re.kr)

미국의 인프라 시설 투자 현안¹⁾과 시사점

- 건설투자 감소로 국가 경쟁력 하락·고용 창출 감소 등 부작용 유발 -

■ 미국의 인프라 시설 투자 개황

- 미국은 고성장 시대였던 1950~60년대에는 GDP 대비 투자의 비중이 3% 이상을 유지 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2.3~2.5%로 감소하면서 국가 경쟁력도 동반 하락²⁾하기 시작
- 2003년에는 투자 비중이 2.3%였으며, 의료비 지출은 3% 이하일 정도로 심각
- 오바마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및 양적 완화 등의 도움으로 2011년에는 투자 비중이 3.3% 까지 상승³⁾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음.
- GDP 대비 투자 비중은 중국은 물론 신흥국에 비해서도 줄어들고 있어 향후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큼.

■ 인프라 투자 감소로 미국이 입는 경제 손실 예시 몇 가지

- 주요 도로의 1/3이 당장 보수를 해야 할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음.
- 가계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교통비가 17.6%로 주거비 다음으로 높으며, 과거 6년 간 교통비의 상승이 임금 상승보다 3.1%나 높음.
- 2003년에 GDP 대비 8.6%였던 물류비가 2005년에는 9.5%로 2년 만에 약 2% 상승함.

■ 인프라 투자가 국민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효과 몇 가지

- 건강한 인프라 재고(Stock)의 1% 증가는 GDP를 1%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 교통 인프라에 대한 10억 달러의 투자는 27,000~34,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음.

1) The Case for US Infrastructure Investment, 미국 미래교육기금모금회(BAF), 2011년 12월(BAF는 선출직 고위 공직자로 구성된 자발적인 모금위원회)

2) 미국 쇠망론(That Used to be US), 토머스 프리드먼, 2011. 6.

3) www.forbes.com, 2013. 4. 1.

- 기존 도로 및 교량에 대한 보수 작업이 신규 건설에 비해 9%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하는 효과가 있음.

■ 국가 인프라 시설 투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 국민의 94%가 인프라 시설 투자에 공감하고 있음.
- 81%의 국민이 인프라 시설 재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증세에 동의
- 국민의 3명 중 2명이 인프라 투자 전에 액수와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전제 되어야 함을 주문

■ 국내 SOC 재정 운영 계획에 주는 시사점

- 우리나라의 SOC 보유량이 OECD 평균 보유량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음.
 - 도로 보급률은 OECD 평균 값인 1.31에도 못 미쳐 30개국 가운데 28위에 머무는 실정
- 지난 6월에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4년 동안 SOC 예산이 11.6조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정부가 의도한 대로 SOC 예산을 삭감하게 될 경우 2014년부터 GDP 대비 투자 비중이 3% 이하로 떨어져 4년 간 평균 2.73%⁴⁾로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국가 인프라 투자 감소가 국가 경쟁력의 저하와 함께 서민층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GDP 대비 SOC 투자의 비중은 최소 3% 이상이 유지되어야 경제 성장성과 고용 창출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내년도 예산 편성시 SOC 투자 삭감은 고용 창출이라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함.
- SOC에 대한 투자를 보유량의 상대 비교로 판단하는 시각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중요시하는 GDP 대비 투자 비중의 확보로 예산 확보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이복남(연구위원 · bnlee@cerik.re.kr)

4) 20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SOC 투자 분야), 2013. 6. 12.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8. 6	서울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자문 토론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서울의 미래변화와 대응 전략에 관한 토론
8. 14	경기도시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 지구 공모형 PF 사업 무산에 따른 후속 대책 관련 2차 자문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참여 - 회의 자문
	새누리당 ·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정 협의회’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참여 - 세제 개선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관련 자문
8. 16	국회 오병윤 · 김선동 · 윤후덕 의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 산재보험 적용 개선 세미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참여 - 해외건설 현장에 대한 국내 산재보험 적용 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

■ 최근 발간물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건설이슈포커스	건설공사 파트너링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건설공사에 파트너링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2006년 ‘건설공사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상생 협의체’ 시범 사업을 시행한 데서 비롯되었음. • 그러나, 일회성 사업으로 종료되고 파트너링제도는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링이 정착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나 영국의 파트너링제도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시범 사업을 시행한 데 기인함. • 파트너링은 공정성, 협력, 팀워크, 공동 문제 해결, 현장에서의 신속한 이견 해소 등 파트너링 팀 구성원이 합의하여 결정한 파트너링 원칙(가치)에 준거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일상의 업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상호 합의한 방법으로 사전적(Proactively)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분쟁 및 소송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함. - 둘째, 공사 참여자 및 이해 당사자가 상대방의 기대와 관심사에 대한 소통을 원활히 하고, 문제를 예상하고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공함. - 셋째, 밸류 엔지니어링과 프로젝트 혁신(Project Innovation)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

민자 SOC 유인책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SOC 국가 예산을 약 12조원 삭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SOC 지방 공약 사업들 역시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키로 했다. 재정적 제약 때문에 내려진 교육지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복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생산적인 SOC 투자를 축소하면 국가의 중장기 성장 기반이 약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당에서조차 공공투자 규모 감축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의 입장이 답답해 보이지만 시야를 넓히면 민간의 도움을 받아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더구나 민간이 빌려준 돈의 상당 부분을 건설되는 시설의 사용료로 회수해 간다면 정부로서는 매우 매력적인 돌파구임에 틀림없다. 그런 연유로 최근에 BTL 사업에 대한 민간 제안의 허용, BTO 및 BTL 혼합형 사업의 도입, 부대 사업의 내실화 등 민자 유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제 공은 민간으로 넘어 왔고 정책의 성공 여부는 민간에 달려 있다. 애석하게도 민자사업의 여건이 예전 같지 않아 과연 민간이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IMF 외환 위기 한때 경제의 구원투수로 각광을 받았던 민자사업이 지금은 높은 통행료와 혈세 낭비 논란에 묶여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는 사업 구조를 바꿔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자는 정부와 그렇게 하면 금융 약정을 파기하겠다는 전주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사업은 부실해지고 신규 사업은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지경이다.

어지간한 유인책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민자 유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최근 개최된 민자사업자 포럼에서 지금의 제도적 틀로는 민간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건설사, 금융기관, 전문가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 반대,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없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재조달시 이익 공유 불인정, 해지시 지급금 확대, 자기 자본 비율 축소, 민자 대상 시설 확대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획기적인 추가 조치를 주문했다.

정부가 구애했는데 상대가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진일보한 유인책을 제시할지는 정부가 얼마나 민간자본에 목말라 있느냐가 좌우할 것이다. 3자가 보건대는 SOC 사업은 재정보다는 민자 유치로 가겠다는 입장이 천명된 이상 민간 투자 사업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사업자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경제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경제, 2013. 7. 19 >

김흥수(원장 · infra@cerik.re.kr)